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일시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프로그램

사회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발표1 한미 사드배치 결정의 배경과 그 의미

김준형 한동대

발표2 정부 사드배치 근거와 주장에 대한 반박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발표3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정세전망

이남주 성공회대, 이경주 인하대

발표4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 전망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김용현 동국대

발표 후 종합토론

한미 사드배치 결정 배경과 요인

김준형 / 한동대

1. 사드배치결정은 한미동맹의 근본 성격과 동북아 전략 환경의 변곡점

- 한미동맹은 대북역지동맹에서 동북아 지역군화
- 아시아 Regional MD 구축: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의 연결고리
- 네트워크에 의한 아시아재균형전략: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Grand Strategy of Network Centrality를 구축하고 있음
 - ※ 2016.6.20 Ashton Carter의 CNAS 연설에서 재강조한 네트워크전략
 - ▶ 미국이 당면한 5가지 전략적 과제: 1) 유럽에서의 러시아의 공세 대처; 2)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중국부상 관리; 3) 북한 핵·미사일 위협; 4) 걸프지역에서의 이란의 위협 통제; 5) ISIL 위협 제거
 - ▶ 아시아태평양,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에 다양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쌍무, 3자, 다자체제를 중첩적이고 광범위하게 네트워크를 구축
 - ▶ 특히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발전 강조
 - ※ 사드는 다층방어의 두 번째 단계인 동시에 아시아 지역방어망 핵심
 - ▶ KAMD: 저층방어(한반도)¹⁾

1) 한국의 MD참여는 사드이전 이미 KAMD부터라고 봐야 한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국 MD참여 문제는 이명박정부 임기 초부터 진행되었다는 정황증거들이 있다. 2008년에 이미 한미양국이 MD에 관한 합동 연구프로그램을 진행했고, 2010년 7월에 양국해군이 해상MD훈련을 실시했으며, 2011년에 미국은 내부적으로 한국을 MD참여국으로 분류했다. 2012년6월 한미국방외교장관 2+2회담에서 나온 '포괄적 연합방어태세'라는

- ▶ THAAD: 중층방어(괌과 일본, 하와이)
 - ▶ SM-3: 미국본토
- 중국의 부상과 불량국가의 비대칭 위협에 대해 기술적 진전에 따라 하나의 네트워크 질서구축: 특히 아시아에서 미국이 rebuilding 하고 있는 동맹질서에서 Regional MD Network은 동맹파트너로 하여금 미국에 전적인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루비콘적 통과점이 될 것임
 - 전작권에 대한 효용성 변화: 과거 전략적 유연성은 분담의 차원이었으나 현재는 협력네트워크 통합의 차원

2. 미국의 주도와 한국의 편승

- 2015년 이후 미국의 대중 압박 본격화의 맥락: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북제재 대중압박, 무역 및 환율압박
- 아시아재균형전략과 미일동맹의 완성: 2015년 4월 아베방미와 미일안보가이드라인 개정 ->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합의로 장애물 돌파 -> 히로시마방문으로 화룡점정
- 박근혜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의 전격발표와 2.23일 미중합의
- 한미정치일정 고려: 차기정권 출범 전 비가역성 확보; 진보정권 탄생가능성에 대한 우려

3. 전망: 동북아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 가속화

- 분단구조와 SFS Rebuilding: 지속가능한 평화부재와 위태로운 안정
- 미국의 역내영향력 유지와 부상하는 중국 포위: 동북아는 한미일 3각 동맹을 통한

용어와 2014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상호운용성 확보'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합'은 MD의 한미일 체화, '포괄적'은 한국방어를 넘는 지역방어, 그리고 상호운용성은 KAMD와 미국의 MD의 상호운용을 의미한다. KAMD가 정부말대로 현재 미국MD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해도 현재 한국의 군사기술로는 독자개발과 운영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조기경보 지원이나, 관련 무기구입, 지휘체계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체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산화율을 높이겠지만, 첨단정보력과 첨단무기체계 운영은 미국이 담당할 채 한국은 완제품 무기만 구입하는 지금까지의 한미동맹 구도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현실성이 적다. 게다가 전작권도 미국이 계속 유지하게 된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 경성봉쇄로, 동남아는 군사경제적 지원으로 연성봉쇄의 수단
- 동북아는 북핵을 고리로, 동남아는 남중국해를 고리로: 접촉점과 경계설정
 - 분단구조 확대재생산 구조: 동북아 역내국 군비경쟁을 가속화함으로써 얻는 미국의 이익(군산복합체)
 - 대외정책에 대한 국내정치의 영향력 강화: 권력투쟁에 국익 볼모가 되고 국내분열을 통해 이득을 얻는 국내정치구조(안보장사꾼과 신민족주의)
 - 한미일 3각동맹의 오해(?): 평등한 3각 협력이 아닌 미일동맹에 대한 한미동맹의 하부구조화
 - 사드배치가 한중관계의 Redline인 이유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 내지는 적어도 대중국 배려인가 아니면 미국에의 편승 사이의 선택의 리트머스 시험지: 중국은 한국이 후자를 선택했다고 보기 시작한 듯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중관계의 파국은 불원. 그러나 한국의 외교 방향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참여로 선회할 경우 달라질 수도 있음

4. 한국의 선택지

○ 미중의 갈등과 협력의 이중구조는 아직 유효

- 최근 미국의 공세적 대중압박: 무역문제, 남중국해 문제,²⁾ 사드배치결정
- 미중 상호의존 심화와 동시에 미래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싸움의 공존³⁾
- 2013 Rancho Mirage의 진실
- 상호협력의 당위성은 수용하나, 현실적용 미지수: 상대의 수용과 양보를 전제
- 자리 잡기와 양국의 세력권의 경계설정이 불안정성 확대: 한반도, 중국-대만 양안, 동중국해, 남중국해

○ 기존 구도 수용? vs. 선제적 아젠다 제시? 선택이 중요

- 현재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전혀 이해상관자(stakeholder)의 역할 부재와 소외(미중 양쪽으로부터 효용성 상실)가 진행 중임

2) 최근에 열렸던 미중경제전략대화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방장관은 “이런 행동을 지속할 경우 중국은 만리장성 안에 고립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3) 미중 콘도미니엄 체제 또는 카르텔체제: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음(2016년 2월 23일 미중 합의를 한국)

- 대립구조와 콘도미니엄체제 모두 대비가 필요⁴⁾
- 사드배치는 재검토해야함: 사드배치의 원인으로 내세운 북핵위협에 대한 감소를 통해 정당성 약화 또는 원천무효를 추진해야 함
- 결국 남북관계개선이 이루어져야지만 한국의 운신의 폭이 생김
- 차기정권의 외교안보의 목적은 신냉전 구도의 보조역할이 아닌 평화구축의 중심역할이어야 함
- 현안에 대한 대증적 접근보다 대전략 필요 ♣

4) 미중 2.23합의는 한국이 주도했어야 했음

정부의 사드배치 근거와 주장에 대한 반박

정육식 / 평화네트워크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칠곡 배치시 주한미군의 병참 허브인 대구·칠곡 및 미군의 증원 전력이 전개되는 부산권은 ‘이론적으로는(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방어 지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평택기지(캠프 험프리), 오산 공군기지, 계룡대, 군산 공군기지도 방어 지역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견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해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성주에서 캠프 험프리 및 오산공군기지까지는 약 160km 떨어져 있다. 군당국은 물론이고 대다수 언론은 사드 요격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km라는 점을 들어 이들 기지가 방어 대상이라고 보도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200km는 최대 사거리이지 유효 사거리가 아니다. 요격 고도가 높아질수록 평면상의 사거리도 짧아진다. 가령 사드의 최대 요격 고도가 150km라는 점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고도 100km에서 요격 시도시 평면상의 방어 지역은 200km가 아니라 최대 사거리를 적용해도 150km 정도로 축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나 ‘코사인’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캠프 험프리나 오산기지를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북쪽에서 날아온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은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하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인 40km에 도달하는 위치는 이들 기지로 떨어지기 한참 북쪽에서 형성되고 그 이후에는 저고도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미사일의 평택 및 오산기지 진입시에는 40km에 훨씬 못 미칠 공산이 크고 이로 인해 사드로 요격이 불가능하다.

또 하나는 성주와 평택권은 거의 수평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요격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직격탄 방식의 사드는 목표물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그나마 요격 성공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측면 요격은 성공 가능성이 더더욱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성주와 ‘측면으로’ 약 100km 떨어진 계룡대, 150km 떨어진 군산 기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 상당수 언론이 이러한 특성들을 무시한 채, 국방부의 보도 자료를 받아 사드 반경 200km 내는 모두 방어 지역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더구나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200km 이상 떨어진 수도권은 아예 방어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사드가 서울 방위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아마도 성주에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되면 정부와 상당수 언론은 수도권과 전남·제주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지게 되었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지역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론에 편승해 한미 군당국과 일부 언론은 제2의 사드 포대 도입이나 패트리엇의 증강, 심지어는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SM-3 미사일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방어체제(MD)는 끊임없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지적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절대 안보’가 아니라 ‘절대 불안’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성주든 어디든, 사드 배치를 반드시 막아야 할 까닭이 아닐 수 없다.

이밖에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의 입장은 문제투성이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는 거창하게 여기지만 사드는 1개 포병 중대”라는 한민구 장관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또한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무수단(화성-10)과 노동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것이라는 것도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사드 배치는 군사주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3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본말이 전도된 인식이다. 사드 배치 결정이야말로 주권적 선택이 가장 비주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정세 전망 - 중국

이남주 / 성공회대학교

1. 사드배치의 배경 - 한반도 방어인가, 대중대러 견제인가?

- 한미는 사드가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역에 배치된다면 수도권 방어에 큰 효과가 없을 것임. 그럼에도 군사적·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을 한 것은 사드배치가 한반도방어라는 목적 이외에 다른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함.
- 중국은 사드의 한국배치가 중국의 전략안보이익에 해를 끼치고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한다고 비판해왔음. 중국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음. 첫째, X밴드를 통해 중국 내륙의 군사적 움직임을 탐지할 목적. 둘째, 한국이 미사일방어체제에 편입되고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한걸음은 더 나가는 것임. 그 동안 중국 언론에서는 전자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왔음.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위의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보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2. 사드배치 결정 전후의 중국의 반응

○ 사드협상 추진 발표 이후 중국의 반응

- (2016.2.12 외교부장 왕이, 운병세 외무장관 회담) 사드배치는 각 국가들이 당면한 정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불리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불리하며, 중국 측의 전략안전이익에 해를 끼친다. 중국은 이에 엄중한 관심을 표명한다.

- (2016.2.14 외교부장 왕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사드체계가 포괄하는 범위, 특히 X밴드 레이더가 탐지하는 범위는 한반도 방위의 필요를 크게 넘어서 아시아 대륙 내부까지 미친다. 중국의 전략안전이익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의 안전이익에도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중국에는 두 고화가 있다. 하나는 “項莊舞劍, 意在沛公”이다, 미국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보기에는 그리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할 필요가 없다. 눈이 밝은 사람에게는 한 눈에 분명하다. 이는 “司馬昭之心, 路人皆知”라는 2,000여 년 전 중국 선인들의 다른 고화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라도 한반도의 핵문제를 빌미로 중국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견결하게 반대한다.
- (2016.2.25 왕이 CSIS에서의 연설) And thirdly, I must say, China's legitimate national interests must be upheld in the process. And many of you may have in mind the deployment of th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The United States is likely to deploy THAAD in the Republic of Korea. Of course, it's up to the ROK government to make a final decision. To some extent, it's their internal affair and China does not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other countries. And we understand that in a very complex environment,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ant to ensure their own security. But I must point out that the X-band radar associated with the THAAD system has a radius that goes far beyond the Korean Peninsula, and reaches into the interior of China. In other words, China's legitimat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may be jeopardized or threatened. So after the news broke that the U.S. and the ROK may discuss the deployment of THAAD, we believe China's legitimate security concerns must be taken into account, and a convincing explanation must be provided to China. I don't think it's too much to ask. It's a reasonable position.
- (2016.3.11 왕이 방러 중) 미국이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의 실제방어필요를 크게 넘어서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안전이익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며, 지역의 전략균형을 파괴해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이 합리적 국방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왜 그 필요를 넘어서는 배치를 하는지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 (2016.3.23 외교부 대변인)
- (2016.3.31 시진핑-오바마 회담. 중국 외교부 부부장 정저광의 설명) 시진핑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체계를 배치하는 것을 견결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는 중국의 국가안전 이익에 해를 끼치고 지역의 전략균형에도 해를 끼쳐 다른 이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损人不利己).
- (2016. 6.25 시진핑-푸틴 “세계전략안정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공동성명”) 역외 세력이 억측으로 만들어낸 이유를 빌미로 유럽에는 “지상 기반 Aegis 미사일방어 체계”를, 아태지역에 사드를 배치하거나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미사일확산영역에서 직면한 도전과 위협과는 관계가 전혀 없으며, 그것이 밝힌 목표와 부합하지도 않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국가들의 전략안전이익을 크게 해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 (2016.6.29 시진핑, 한국총리와의 회담 중)

○ 사드배치 결정 이후

<정부반응>

- (2016.7.8 국방부 대변인) 중국은 국가전략안전과 지역전략균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
- (2016.7.9 중국 외교부장 왕이) 우리는 사드배치가 한반도의 방위필요를 크게 넘어선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어떤 변명도 모두 헛된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이 조치 배치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할 충분한 이유와 권리가 있다. --- 우리는 한국의 친구들이 사드배치가 한국의 안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실현하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가,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정으로 도움을 줄 것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하기 바란다.
- (2017.7.11) 외교부 대변인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미국의 사드배치를 동의한

것은 한국 자신을 전략력균형이 파괴되는 변국에 끌려들어가게 만들었다. 한국민중이 이로부터 비롯되는 안전문제를 깊이 우려하는 것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언론반응>

- (환구시보, 2016.7.9) 다섯 가지의 대응 방안은 제시(사드배치 지역, 사드배치와 연관된 기업·서비스 기구에 대한 제재; 사드배치를 주장한 한국 정계인사들의 중국입국 제한; 사드에 대한 기술적 교란 및 이 시설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배치 등의 군사적 대응방안 연구 및 제정; 대북제재의 영향에 대한 재평가; 사드배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중러공동대응 방안 검토 등)

- (天下周刊圓桌會：薩德來了中國該如何反制？

<http://news.sina.com.cn/w/zg/2016-07-11/doc-ifxtwihq0031606.shtml>)

미국과 일본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말해 약간의 변화 가능성이 있어 구별해서 대응해야 한다. 다만 한국을 설득하는 동시에 적당히 강경할 필요가 있다.

○ 몇 가지 주목할 점

- 미국변수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음. 즉 사드배치는 대중포위망 강화의 일환이며 시기도 중국의 관심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국제중재재판 판결에 집중되고 있는 시점을 의도적으로 선택.
- 한국의 행동을 주도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요구 혹은 압력에 따른 수동적 선택으로 평가. 단 사드배치를 계기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우려.
- 중국 내에서 대미정책 등과 관련해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한 반도전략에 대한 조정 요구도 등장하고 있음.

3. 한중관계 전망과 대응

○ 중국 한반도 정책에 대한 영향

-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 사드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사드배치가 결정된 것에 반발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 이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만이 아니라 중국 대외정책의 신뢰성과도 관련된

문제가 되었음.

- 다만 어떤 대응 수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고 있음.
- 미국에 대해서는 당장 뚜렷한 수단이 부재. 장기적 게임으로 판단.
- 한국에 대해서는 과도한 대응으로 한국을 완전히 미국 품에 안기게 만들거나 국제적 규범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
- 군사적 조치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따른다는 점에서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경제제재와 관련해서는 노골적인 보복보다는 간접적인 보복수단을 단계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음.
- 당장 북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는 식의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을 것이나 대북제재의 강도는 뚜렷이 악화되고 점진적 회복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음. 물론 북한이 이 국면을 이용 5차 핵실험 등에 나선다면 중국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이 딜레마를 중국이 어떻게 해결해갈지도 매우 중요하게 관찰할 점.
- 사드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이를 둘러싼 한중, 중미 사이의 갈등을 계속될 것임. 그리고 한중관계 및 한반도 정세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향후 대응

- 남북관계의 개선이 없이는 상황의 근본적인 전환이 어려움. 현재 미국과 한국 모두 사드를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주장하는 이상 남북관계의 진전은 이러한 명분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큼.
- 사드문제가 단순히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한반도의 안전에 큰 위협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사드반대의 필요성이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야 함. 이와 함께 한미군사동맹이 한국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라는 점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한국이 다른 영역의 미중갈등에 끌려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함. 안보영역에서 대미 의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가 우려됨. 남중국해 문제에서 한국이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게 되면 한중관계는 완전히 파탄시킬 것임.♣

발제 3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정세 전망
- 일본

이경주 / 인하대학교

발제 4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전망

김창수 / 코리아연구원

발제 4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전망

김용현 / 동국대학교

토론회 한미 사드배치 결정과 한반도평화

발행일 2016. 07. 13

발행처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평화군축센터

담 당 이미현 팀장 02-723-4250 peac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6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